

금융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

최규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의 대기성차관을 긴급지원 받으면서 체결한 협약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단한 혼란에 빠져있다. 높은 차입금 비율에 의존하여 경영하여 왔던 수많은 기업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정책과 은행자기자본(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신용경색(대출기피현상)에 따라 무더기로 줄도산을 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1997년도 IMF지원을 초래한 것은 일시적 외환유동성부족이었다. 이는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재벌문제,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이라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 요인들이 누적되어 일시에 폭발한 것이지만, IMF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방

으로 단순한 외환위기를 총체적 신용공황 상태로 확산시켰다. 얼마 전 IMF 아태지역 담당자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도 고금리정책이 그 당시 한국에서의 외화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딱딱 우겨댔다. "IMF는 환자에게 한 가지 처방밖에 할 줄 모르는 돌팔이 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미국 MIT대의 폴 크루그만 등 진보적 성향의 학자 뿐 아니라, 하버드대의 마틴 펠트슈타인 같은 보수적 학자와 전직 세계은행 부총재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까지도 IMF의 고금리정책을 신랄히 비난하고 있는데도 IMF간부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IMF와의 협약을 통해서 금융·경제정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경제정책 부문에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4만여 금융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에 불안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있어 우리나라는 가히 IMF의 신탁통치를 받는 국가라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근래 정부는 공공·재벌·노동·금융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조치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성과를 이야기하였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으며, 인원감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경영지배구조 개편과 연봉제 실시 및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만은 대우그룹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여지없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강제합병과 퇴출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제일은행은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서울은행 경영은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잠기간 방치되어 더욱 악화되었으며, 각 은행은 새권안정기금 30조원을 조성하는데 강제 동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76조 원이라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제1차 구조조정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른 제2차 구조조정 역시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금융노동자들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4만여 금융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에 불안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IMF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금융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성명서, 수 차례의 건의문을 정부

와 각 정당,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IMF와의 협의장 기습점거시위 등 수많은 시위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오락가락 하는 금융정책에 시장불안까지 겹쳐 자금경색, 신용공황과 제2의 금융위기로 까지 예측되는 현실 속에서 금융노조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금융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는 방법 말고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판단에 오는 7월 11일을 총파업 돌입일로 잡아놓고 있다.

2. 금융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는 절박한 상황

불법파업 -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한국에서 은행은 필수공익사업장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다 보면, 파업을 할 수 없다. 만일 파업을 결행하게 된다면, 많은 지도부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최근 대통령이 방북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이라 규정한 집단의 수괴를 만났다. 불과 몇 년 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었다.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어느 누구도 불법이므로 처벌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법이 아무리 지엄해도 정당하지 않은 법

은 깨어져야만 한다. 금융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국가경제가 파탄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IMF사태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제반정책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불안정 → 실물경제의 위축 → 경제의 대외종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다. 사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 관치를 일삼는 부도덕한 관료, 정책부재의 정부에 맞서 독립투쟁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파업이란 마지막 무기로 치연히 돌파하고자 한다.

정부 금융정책의 문제점

정부 금융정책 방향은 크게 대형화·겸업화·민영화·개방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자본·외환 시장의 전면적 개방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 계획은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한 개방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미국 증시와의 동조현상도 확대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는 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부실의 원인과 책임

우리나라의 은행은 국민저축을 형성하여, 이를 전락산업에 배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편지금융과 정

경유착의 폐해가 심각하게 커짐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엄청난 데 엄청난 격으로 IMF의 그릇된 처방이 한국 기업의 대량 도산을 발생시켰고, 이것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로 전가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 워크아웃 대상 기업 64개에 대한 100조원의 부실 가운데 12개 사의 대우그룹사가 안고있는 부실은 무려 66조에 달하며, 이는 단적으로 IMF위기 사태 초기에 정부가 대우처리 문제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로 부실을 제거할 수 있나?

부실은 중복부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만 명의 인력감축을 수반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은행들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7월 11일 서직일 파업은 금융노동자들의 고봉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정부는 자신이 조흥, 한빛, 서울은행의 최대주주이므로 정부가 직접 합병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경제 발전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한 입장정리가 모호하고, 추후 소규모 위기가 발생할 경우 누적 부실로 인해 외국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는 설부른 조치라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합병 전에 일차적으로 부실을 제거한 후 5~7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친다. 미국에서는 중남미의 외채위기 이후의 누적된 부실을 해결한 후 대형화를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거품 경제로 인한 누적된 부실을 해결한 후 대형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5~7년 정도의 숙성기간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등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면서 거대은행(mega-merger)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2차 구조조정계획 전면 보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표면적인 주장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대규모 공격자금 추가투입이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은행권의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형합병을 통해 감원, 부서통합, 자산정리를 단행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참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합병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반대로 은행들을 외국자본에 넘기고 있고, 미국은 대공황이후 은행과 증권업간의 분리주의를 택하였으나, 대공황 때 증시폭락으로 인해 은행도산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반성하여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대외 추종형의 대형합병을 강행하고 있다.

대형화한다고 부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은행들은 금융시장의 시장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현 정부의 의자선호 정책이 지속되는 한 대형화·겸업화 이후 외국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구조조정 계획은 전면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권 안정이 최우선

지금은 금융권의 개혁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조속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권을 흔들면 흔들수록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금융안정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위기가 도래하고, 국적기업과 금융기관의 대량 매각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리한 '증권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반전시켜야 한다. 현재 증시는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원이 될 수 없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금융은 은행권 중심으로 가야하며, 은행의 구조조정에 앞서 기업 특히 재벌의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격자금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유컨대, "기업의 구조조정은 건살을 빼는 것이라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핏줄을 자르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야 한다

한국은 경제후발주자로서 자원의 집중과 전략적 배분 없이는 산업화가 불가능

하다. 이러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외국자본에게 맡길 수 없다. 특히 은행권은 증시에 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하기에 유리하므로, 은행권의 외자종속을 막아야 한다. 금융산업 지형은 국적기업의 국제적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근간이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야 한다. 대북경협사업, 특히 북한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등 새로운 사업개발에서 그 기회를 찾아야 한다.

4. 금융노동자의 요구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실패한 경제각료는 퇴진하고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이와 관련 청문회 등을 개최하라.

2. 관치금융에 의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부가 책임져라. 실물부문에서의 부실은 대개 정부의 정책자금, 압력에 의한 지원 등에서 발생하여 은행으로 전가되고, 정부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대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며, 관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실물부문 부실 발생기회를 차단하고, 만일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이를 은행으로 전가시키기 전에 기업차원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이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권력의 힘으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3.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것은 근로자대표이사제, 노동조합의 감사 추천권을 제도화 등을 포함한다.

4.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을 철회하라

5. 종속적인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유보하라.

7월 11일 시작될 파업은 금융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각계 각층 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